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中學生의 所得分配에 대한 意識調查

指導教授 朴 龍 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趙 丁 純

1995年 8月

濟州道 中學生의 所得分配에 대한 意識調查

指導教授 朴 龍 垞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 專攻

提出者 趙 丁 純



趙丁純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7月 日

審査委員長 金 恒元 (印)

審査委員 宋 成 大 (印)

審査委員 朴 龍 垞 (印)

<抄錄>

濟州道 中學生의 所得分配에 對한 意識調查

趙 丁 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 專攻

指導教授 朴 龍 炯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태와 중학생들의 소득분배 관련 의식을 조사하여 사회과 경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과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을 파악했으며, 소득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의식을 묻는 질문지를 이용, 제주도 중학교 3학년 학생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나타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90년 이후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다.

둘째, 현행 사회과 교과서에서 소득분배 내용은 기능적 분배 이론에 치중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타 경제 개념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경제 전반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중진국 이상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지배적이었고, 고도 성장의 주체로는 근로자(72.4%)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학생이 많았다. 대다수 학생들이 앞으로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는

데, 환경 오염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앞으로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은 분배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학생이 과반수였다.

넷째,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52.9%가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했으며, 소득 불균등 요인은 근로 소득보다 재산 소득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높았고, 근로 소득 격차 요인으로는 학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보험 제도(34.8%)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앞으로의 소득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61.6%가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리고 개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본인의 노력(82.5%)을 중요하게 꼽았으나 높은 경제 성장에도 존속하는 빈곤의 책임은 정부에 가장 많이 돌렸다.

다섯째, 사회 교과서의 소득분배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어렵다고 한 학생은 그 이유를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항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제교육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윤리 및 태도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둘째,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문제와 절대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셋째, 실제 수업에 있어 소득분배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중심의 내용 구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너무 강조하거나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적인 설명을 통해 경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논쟁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업을 토론 중심, 증거 위주의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目 次

I. 序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3
II. 所得分配의 理論的 背景	4
1. 所得分配의 概念	4
2. 所得分配의 測定方法	6
3. 우리나라의 所得分配 現況	9
4. 社會科 教科書의 所得分配 內容	15
III. 結果 및 論議	20
1. 本研究의 基礎資料 內容	20
2. 經濟 全般에 대한 意識	22
3. 所得分配 問題에 대한 意識	37
4. 教科書 所得分配 內容에 대한 意識	51
IV. 結論 : 要約 및 提言	58
參考 文獻	62
英文 要約	64
附 錄	67

表 目 次

<表 1> 통계청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0
<表 2> 朱鶴中 등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0
<表 3> 金大模·安國臣 등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1
<表 4> 岩本卓也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1
<表 5> 姜善代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2
<表 6> 朱 潤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2
<表 7> 중학교 社會科 경제 영역의 기본 개념과 하위 개념 -----	17
<表 8> 중학교 社會科 소득분배 내용 관련 단원 -----	18
<表 9>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	21
<表 10>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	21
<表 11> 경제 발전 단계 -----	23
<表 12> 경제 발전의 주체 -----	26
<表 13> 산업 구조의 개편 -----	28
<表 14>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관 -----	30
<表 15-1> 경제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 -----	32
<表 15-2> 경제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 -----	34
<表 16>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	36
<表 17> 빈곤 계층에 대한 책임 -----	38
<表 18> 경제적 성공 요소에 대한 인식 -----	40
<表 19-1>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인식 -----	42
<表 19-2>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인식 -----	44
<表 20> 근로소득의 격차 요인 -----	46
<表 21>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방법 -----	49
<表 22> 소득분배에 대한 미래관 -----	52

<表 23> 소득분배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	54
<表 24> 소득분배 내용이 어려운 이유 -----	55
<表 25> 경제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	57

그 립 목 次

<그림 1> 로렌츠 곡선 -----	7
<그림 2> 심분위분배율에 의한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3
<그림 3> 지니계수에 의한 소득분배 추계 결과 -----	13



I. 序 論

1. 研究 目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 부문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룩했다. 30여년 동안 經濟成長率은 연평균 8%에 달했고, 國民總生産(GNP)은 1962년의 23억달러에서 93년에는 3,287억달러로 무려 143배나 팽창하였으며, 1인당 國民所得도 62년 87달러에서 93년에는 7,466달러로 86배나 증가하였다¹⁾. 1991년 현재 한국은 세계 제 10위의 무역 대국이면서 경제 규모면에서는 세계 제 14위에 올라섰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는 신생공업국(NICS)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후진국들에게 '발전의 모델' 국가로까지 간주되고 있다.²⁾

그러나 이렇게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994년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자³⁾는 190만명(전 인구의 약 4.3%)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의 果實이 고루 분배되지 않음으로 인해 所得 不均等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政治 民主化와 관련하여 일어난 사회 각계 각층의 제 몫찾기 운동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한 소득분배 등에 대한 불만은 단순한 '所得' 분배 문제 뿐만 아니라 富의 분배 문제 및 富의 축적의 정당성 문제까지 포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富와 소득 기타 사회·경제적 가치 및 재화의 형성과 취

1) 정승우(1994), 「중학교 사회 보충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 교육연구소, pp. 17-18.

2) 宋丙洛(1994), 「韓國經濟論」, 博英社, p. 8.

3) 윤석범(1994), 「한국의 빈곤」, 世經社, p. 336.

현행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절대 빈곤 수준은 ① 1994년 현재 월 1인당 소득이 16만원을 하회하며, ② 재산이 1,700만원을 상회하지 않는 가구로 잡고 있다.

득에 관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불안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富와 소득 創出의 과정을 內面化시키고 分配正義에 관한 감각과 실천 역량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키워주는 경제교육적인 배려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도 요청된다 하겠다.⁴⁾

인간의 생활은 경제 활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일상 생활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경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의 경제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학교 경제교육은 학생들에게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교육이다.⁵⁾ 따라서 학교 경제교육은 현실 경제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관련하여 선진국 단계에 이미 들어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비판의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업종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 불균등과 상대적 빈곤에 대한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本研究는 이러한 인식하에 학교 경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경제 현안 중 하나인 소득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관련 내용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최인화(1994), "분배정의와 사회과 경제교육," 「경제 교육」,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통권 제 5호, p.20.

5)이태근(1994), "경제교육의 변천," 「경제교육 연구」, 이태근 박사 정년기념논문발간위원회, p.123.

2. 研究 方法

本研究의 研究 方法은 文獻 研究와 實證 研究를 병행하였다.

우선 先行 研究 文獻을 중심으로 소득분배의 개념, 측정 방법,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현황과 이에 대한 국민의 認識度를 파악했으며, 중학교 社會科 교과서의 소득분배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 중학생의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意識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價値觀을 조사 분석하였다.



Ⅱ. 所得分配의 理論的 背景

1. 所得分配의 概念

지금까지 分配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所得(income)과 富(wealth)이외에도, 한 사회의 모든 긍정적, 부정적 가치⁶⁾와 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적 厚生(economic welfare)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두 개념들은 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어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富(wealth), 혹은 재산 개념은 경제적 厚生 개념과는 보다 밀접하지만 그 측정이 힘들다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의 분배 이론은 실제적인 경제적 厚生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厚生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측정에 있어 객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 개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⁷⁾.

소득분배에 관한 이론은 '機能的 分배 이론'(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과 '階層別 혹은 人的 分배 이론'(size distribution of income)으로 대별할 수 있다⁸⁾.

機能的 分배 이론은 전체 소득이 각각의 생산요소에 분배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즉, 근본적으로 생산요소의 '機能'을 기준으로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6) 김경모(1993), "韓國 學生의 所得分配 概念 理解에 關한 研究,"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39.

긍정적인 가치에는 물질적인 편익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으나 비물질적 가치, 예컨대 자유, 애정, 혹은 자존심 같은 것도 분배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가치로서는 납세의무 같은 물질적인 것과 병역의무 같은 비물질적인 부담을 생각할 수 있다.

7) 上揭書, p. 39.

8) 宋丙洛(1994), 前揭書, p. 660.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생산에 공헌한 만큼 노동소득, 이자소득, 地代소득, 이윤소득 등을 분배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階層別 분배 이론은 전체 소득이 각각의 소득 계층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국민은 모두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 "서민층이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부양 가족이 없는 노인, 정박아 등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분배이다. 階層別 분배를 검토할 때는 '家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계소득이 소득분배 研究의 기본 소득이 되며, 소득의 형태가 근로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문제삼지 않는다. 결국 어느 개인이 근로자 또는 자본가임을 불문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얼마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機能的 분배 이론은 新古典學派의 限界生産成⁹⁾ 개념을 축으로 精緻한 이론 모형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限界生産成의 의미와 그 측정의 난점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¹⁰⁾

이론적으로는 機能的 분배의 구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도 자본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가의 소득도 자본소득과 경영에 참가하여 얻은 근로소득이 합쳐져 있으며, 자본가나 자영업주의 소득도 그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機能的 분배 이론은 임금이나 이자, 이윤, 地代의 결정원리를 원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을 각 생산요소의 限界生産成의 결과라는 결론 아래 합리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반면에 階層別 소득분배 이론은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 사이의 소득분배 현상에 관심을 두는데, 이같은 주제 영역은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소득분배 현

9) 限界生産成(marginal productivity)이란 생산과정에 있어 각각의 생산요소의 단위요소를 추가할 때 얻을 수 있는 전체소득의 기여분을 의미한다. 임금은 그것이 도출된 생산요소인 노동의 限界生産成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 이윤은 자본의, 地代는 토지의 限界生産成이 시장 가격을 통해 반영된 것이다.

10) 김경모, 前揭書, p. 45.

상에 대해 일차적으로 인지하는 내용들과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소득이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에 빈곤층은 얼마나 적은 몫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분배 이론의 주류는 階層別 분배 이론이라 하겠다.

소득분배 개념은 소득의 차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되고, 이것은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과 결부되어 있다. 사회적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소득분배 개념의 사실적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과 分配正義에 대한 것은 소득분배 개념의 가치판단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 개념은 그 내용의 성격상 소득분배 현상의 사회적 사실에 대한 認知的 측면과 그와 관련된 사회 가치에 대한 가치판단 관련 認知的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2. 所得分配의 測定 方法

1) 십분위분배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십분위분배율(DDR:deciles distribution ratio)이란 소득의 크기대로 순서를 매긴 다음 十分位로 구분하여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십분위분배율은 그 값이 클수록 공평한 소득분배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均等度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DDR} > 45.0\% & : \text{高均等 분배} \\ 35.0\% < \text{DDR} < 45.0\% & : \text{低均等 분배} \\ \text{DDR} < 35.0\% & : \text{不均等 분배}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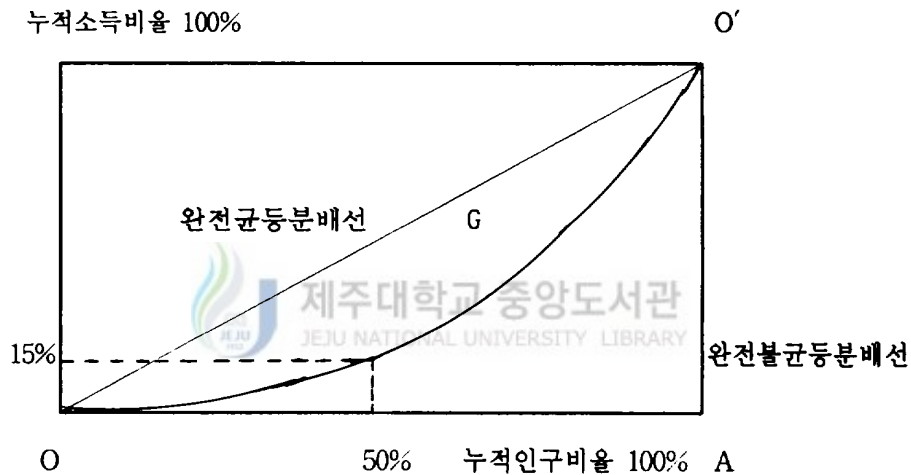
11) 上掲書, p. 39.

십분위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고 소득분배 정책의 주대상이 되는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소득분배 측정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¹²⁾

2)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로렌츠 곡선은 <그림 1>과 같이 소득분배 형태를 하나의 그림으로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사람들을 소득의 크기대로 순서를 매긴 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하여 가로축은 인원수를 누적하고, 세로축은 소득을 누적인 것이다.

<그림 1> 로렌츠 곡선



<그림 1>이 의미하는 바는 하위 50% 계층의 사람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인구의 10%가 總所得의 10%, 인구의 20%가 總所得의 20%와 같이 분배되는 경우, 즉 인구나 같은 비율로 소득이 분배되는 경우를 '完全 均等 分配'라고 하며, 이 때의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 OO'로 표시된다.

12) 宋丙洛(1994), 前掲書, pp. 668-671.

그리고 정반대의 경우는 한사람이 소득 100%를 차지하는 경우로서 '完全 不均等 分配'라고 하며, 이는 그림에서 OAO' 선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실제의 소득분배는 어느 경우와도 거리가 멀며, 현실적인 소득분배는 完全均等線 OO'와 完全不均等線 OAO'사이에 존재한다.¹³⁾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1>에서 G의 면적을 삼각형 OAO'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지니 계수(GC:Gini concentration coefficient)이다. 로렌츠 곡선이 完全均等線에 가까울수록 지니 계수의 값은 작아지고, 完全不均等線에 가까울수록 그 값은 커진다. 지니계수의 값은 0과 1 사이로서, 0은 完全 均等 分配, 1은 完全 不均等 分配를 나타낸다. 지니 계수의 값이 낮을수록 소득분배의 均等度는 높게 되나 심분위분배율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된다.

그런데 지니계수는 전 계층의 소득분배 형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 특정 계층이나 계층간의 소득분배를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지니계수의 값은 <그림 1>에서와 같이 G의 절대 면적만을 중시하지 모양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즉, 실제 계층간의 분배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분배율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도 고소득층의 소득분배율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높으면 G의 면적은 불변이므로 지니 계수의 값은 일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분위분배율이 더 선호된다.¹⁴⁾

소득분배 不均等度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이외에도 파레토(V.Pareto) 법칙이나 타일(H.Theil) 지수, 앳킨슨(A.Atkinson) 지수 등이 있으나 심분위분배율과 지니 계수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심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도 현실적인 분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분배문제가 가치판단의 다양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이유 외에도 소득 통계상의 신빙성이 문제시 되고, 소득 관련 자료만으로 분배 문제를

13) 上掲書, pp. 671-673.

14) 上掲書, pp. 672-673.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宋丙洛은 소득분배 측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① 근로소득은 비교적 정확히 파악될 수 있으나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그렇지 못함에 따라 소득 통계 자료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 ②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는 생산물의 가치 평가가 곤란하다는 점, ③ 소득은 비교적 균등 분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의 公共財나 상하수도, 주택 등의 기초 생활 시설, 그리고 생활 환경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경우, 福祉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균등 분배는 그 중요성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¹⁵⁾.

3. 우리나라의 所得分配 現況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研究는 극히 저조하였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階層別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 결과는 객관적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지니 계수와 십분위분배율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계하는 것에 좌우된다. 따라서 연구에 이용된 자료와 자료의 보완 방법에 따라 추계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계에 쓰이는 자료는 주로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통계연보」¹⁶⁾이며, 연구자에 따라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추계하고 있다.

소득분배에 대한 공식 통계는 재정경제원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의 통계청이 1980, 1985, 1988년의 연간 소득사항을 조사하여 십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를 추계한 것을 들 수 있다.(〈表 1〉 참조)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1980년대 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上揭書, pp. 674-675

16) 李京姬(1993),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태와 국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pp. 25-27.

〈表 1〉 통계청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구 분	1980	1985	1988
십분위분배율	0.3538	0.4426	0.4659
지니 계수	0.3891	0.3449	0.3355

資料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각 연도.

朱鶴中(1987)등은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하고 여기에서 제외된 가구의 소득을 추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1965, 1970, 1982, 1984년의 階層別 소득분배를 추계했다.¹⁷⁾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84년 지니계수가 0.357로서 1976년의 0.3808에 비해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表 2〉 참조)

〈表 2〉 朱鶴中 등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구 분	1965	1970	1976	1982	1984
십분위분배율	0.463	0.472	0.372	0.437	0.447
지니 계수	0.3439	0.3322	0.3808	0.3574	0.3570

資料 : 朱鶴中·尹珠賢, “1982년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計와 變動 要因,”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4, 봄號.

趙淳·朱鶴中 외(1987),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대학교출판부.

그러나 이와는 달리 金大模·安國臣(1987), 岩本卓也(1989), 姜善代(1990)¹⁸⁾ 朱潤(1993)¹⁹⁾ 등의 연구 결과는 1980년대 이후 분배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表 3〉, 〈表 4〉, 〈表 5〉, 〈表 6〉 참조)

17) 金龍河(1992), “所得 分配에 대한 中學生의 意識과 教科書 內容의 適切性,”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27.

18) 李京姬(1993), 前掲書, pp.31-38.

19) 朱潤(1993),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移와 그 決定要因에 관한 考察,”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14.

〈表 3〉 金大模·安國臣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구 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십분위분배율	0.4692	0.4792	0.4519	0.3907	0.3893	0.3868
지니 계수	0.3457	0.3377	0.3570	0.3929	0.3944	0.3905

구 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십분위분배율	0.3561	0.3726	0.3992	0.3816	0.3963	0.4148
지니 계수	0.4084	0.3964	0.3828	0.3919	0.3860	0.3734

구 분	1982	1983	1984	1985
십분위분배율	0.3377	0.3508	0.3785	0.3283
지니 계수	0.4056	0.4005	0.3937	0.4105

資料: 金大模·安國臣(1987), “韓國의 所得分配 및 그
決定要因과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意識 構造,” 문교부.

〈表 4〉 岩本卓也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구 분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십분위분배율	0.3780	0.3793	0.4158	0.3334	0.3661	0.3918
지니 계수	0.3984	0.3956	0.3742	0.4334	0.4094	0.3930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십분위분배율	0.3632	0.3678	0.3472	0.3285	0.3392	0.3191
지니 계수	0.3937	0.3926	0.4041	0.4163	0.4132	0.4311

資料: 岩本卓也(1989), “韓國의 所得分配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資産分配
分析,”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表 5〉 姜善代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십분위분배율	0.4381	0.4285	0.4445	0.4732	0.4336	0.4645	0.4795
지니 계수	0.3622	0.3682	0.3566	0.3440	0.3649	0.3490	0.3901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십분위분배율	0.4293	0.4672	0.4260	0.4190	0.4171	0.4064	0.3940
지니 계수	0.3608	0.3421	0.3636	0.3666	0.3696	0.3760	0.3809

資料: 姜善代(1990),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과 그 決定 要因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表 6〉 朱 潤의 소득분배 추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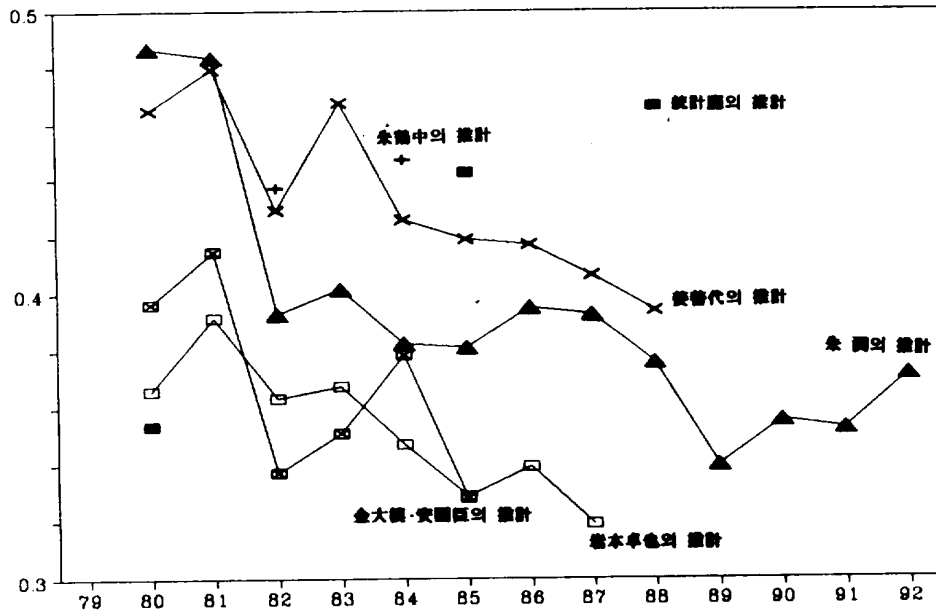
구 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십분위분배율	0.4866	0.4834	0.3930	0.4016	0.3826	0.3813	0.3953
지니 계수	0.3372	0.3347	0.3767	0.3737	0.3805	0.3804	0.3771

구 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십분위분배율	0.3926	0.3760	0.3399	0.3556	0.3524	0.3718
지니 계수	0.3725	0.3840	0.4127	0.4017	0.4013	0.3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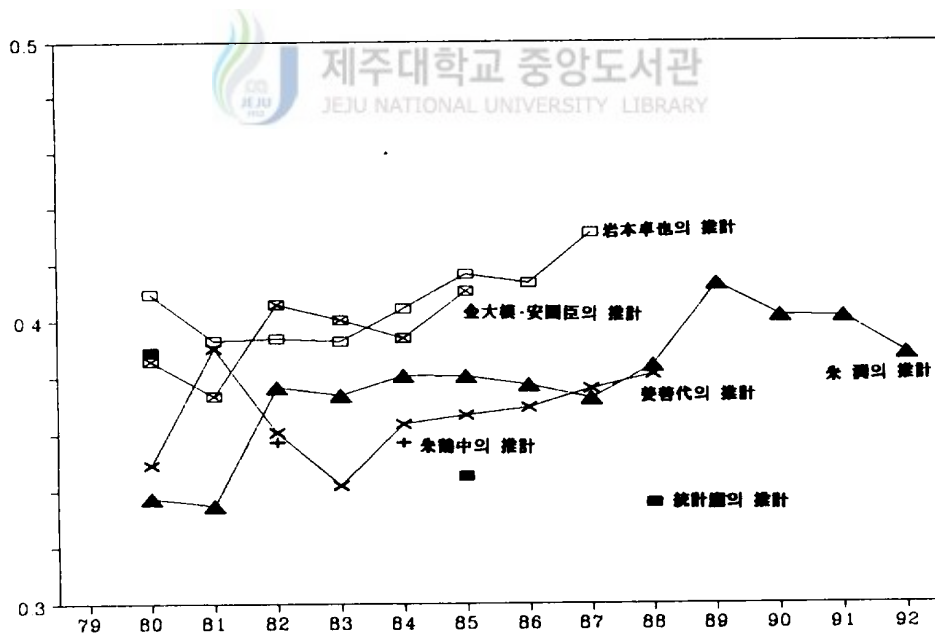
資料: 朱 潤(1993),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의 推移와 그 決定要因에
관한 考察," 석사학위 청구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그림 2>와 <그림 3>은 소득분배에 대한 先行 研究 결과를 종합하여 1980년
대 이후의 십분위분배율과 지니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십분위분배율에 의한 소득분배 추계 결과



<그림 3> 지니계수에 의한 소득분배 추계 결과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推計者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기획원 통계청의 추계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니 계수와 십분위분배율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다.

통계청과 朱鶴中의 추계를 제외한 연구 결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朱 潤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90년 이후에는 '89년에 비해 미미하게 개선되기 시작해 '92년에는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89년을 頂點으로 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88년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과 경제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4%가 5년전에 비해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²⁰⁾, 1989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는 국민의식이 더 부정적이어서 95.5%가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²¹⁾. 또 1991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에서는 '91년 현재 자신이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7.1%, 94년에는 38.2%에 달하고 있어²²⁾ 상당수의 국민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체감상의 불평등과 통계상의 불평등과의 괴리는 부분적으로는 소득 통계나 불평등 지표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당한 권리', '公平性', '平等性', 그리고 '받을만한 자격'의 네 요건이 모두 만족될 경우에 어떤 분배 상태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데 지니계수, 십분위분배율 등의 불평등 지수는 '平等性'에서의 평가만을 가능하게 할 뿐, 나머지 세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전달해 주지 않는다²³⁾.

따라서 소득분배 지수가 양호하다고 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지수도 반

20)李京姬(1993), 前掲書, p. 60.

21)金龍河(1992), 前掲書, p.56.

22)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 지표」, p.237.

23)고필수(1995), "분배 불평등의 원인과 개선 방안," 「제대 신문」, 제 524호, 3면.

드시 양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 정책은 우리 사회의 分配正義 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고도성장 정책은 산업화 및 수출 촉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의 계층과 집단에 특혜를 주었고, 특혜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그러한 특혜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했다. 즉,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대기업을, 내수산업에 비해서는 수출산업을, 농업에 비해서는 공업을, 그리고 근로자에 비해서는 기업주를 우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에서 결정적으로 公平性이 결여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²⁴⁾. 이외에 사람들로 하여금 분배의 상태가 악화되어 왔다고 느끼게 만든 요인으로는 계층간 이동성의 저하, 과소비 현상 같은 사회적인 현상들과 부동산 투기, 사채 놀이, 건물, 토지 임대 등을 통한 불로 소득, 증권 시장을 통한 富의 편중 등에 대한 정책상의 실패를 들 수 있다.²⁵⁾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가 國民總生産(GNP)의 40%대에 달한다는 사실²⁶⁾은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 불균등에 대한 불만이 주관적인 것만은 아님을 말해 준다.

4. 社會科 教科書의 所得分配 內容



경제교육이란 “경제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주변의 財貨와 用役に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들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규칙이나 기본 원리 내지는 사회적 체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경제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감 있는 행

24)李俊求(1992),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 茶山 出版社, pp.469-472.

25)上揭書, pp. 486-487.

26)중앙일보(1995, 3, 21), 제 9285호, 3면.

27)朱子文(1992), “사회교육에서의 경제교육,” 「社會教育研究」, 서울대학교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회, 教育科學社, p.298.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사고 방식을 심어주는 것이다.²⁸⁾

학교 경제교육은 社會科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 목적도 책임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양성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社會科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 현상의 기본 원리와 경제 현상들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지식면), 일상 생활에서 경제 문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배양하며(기능면), 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협력하여 복지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가치·태도면)이다.²⁹⁾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학교 社會科 경제 내용은 11개의 概念群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식의 체계가 그러하듯이 社會科 경제 부분의 내용도 요소별로 事實(fact), 概念(concept), 一般化(generalization)로 구성되어 있는데³⁰⁾, 경제교육에서는 학습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의 실례들을 담은 수많은 概念과 이와 관련된 一般化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表 7>은 鄭正燾의 11개 경제학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현행 제 5차 중학교 社會科 경제 분야를 분석한 것이다.³¹⁾

소득분배에 관련되는 하위 개념으로는 가계소득, 소득 재분배 문제, 복지 등이 있다. 가계소득이란 ‘家計’의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별하고 있다. 현행 社會科 교과서에 의하면, ‘---가계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여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³²⁾---’고 되어 있다. 가계로부터 기업에 제공된 노동, 토지, 자본 및 경영 활동이 생산과정에 투입 되어 임금, 지대, 이자 및 배당금, 이윤의 형태로 분배된다는 것이다.

28)李貞叔(1993), “사회과 경제 영역의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7.

29)최병모(1989), “사회과 경제교육론,” 「韓國社會科教育學概論」, 韓國社會科教育研究會, 教育科學社, p.195.

30)上揭書, p. 196.

31)鄭正燾(1994), “學校 經濟教育에서 教育內容 構成의 課題,” 「경제 교육 연구」, 이태근 박사 정년기념논문발간위원회, p. 159.

32)교육부(1994), 「중학교 사회 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 248.

〈表 7〉 중학교 社會科 경제 영역의 기본 개념과 하위 개념

기본 개념	하 위 개념	목 표
① 기본경제문제	경제의 기본 문제, 희소성, 선택, 경제원칙	효율성
② 소비	가계, 수요, 수요법칙, 소비지출, 저축, 소비자 보호	효용성
③ 소득 분배	가계소득, 소득 재분배, 복지	행평성
④ 생산	기업, 공급, 공급법칙, 생산요소, 분업	효율성
⑤ 시장	가격, 가격기능, 경쟁시장, 독점, 과점	효율성
⑥ 경제 체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경제적 유인	자유
⑦ 국민 소득	국민경제, 국민총생산, 부가가치, 경제성장	완전고용
⑧ 화폐와 금융	화폐기능, 통화량,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물가안정
⑨ 재정	조세, 세입, 세출, 예산, 재정 정책	사회후생
⑩ 국제 경제	국제분업, 국제수지, 자유무역, 보호무역, 국제경제 협력	효율성
⑪ 경제 변동	경제계획, 경제성장, 시장개방	안정·성장

소득분배 문제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합당하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는데 최근들어 소득 재분배의 문제가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며,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각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의 차이, 상속 재산의 차이, 정책상의 실패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것은 사회 불안과 경제 성장의 果實 배분에 대한 회의로 연결되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줄어들게 한다. 따라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며, 국민들의 사회적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의 재분배 정책이 요망된다.

현행 중학교 社會科 교과서에는 소득의 재분배 정책으로 조세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조세 정책으로는 누진세, 상속세, 특별소비세, 조세감면 등을 들고 있으며,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복지와 관련하여 사회보험과 公的 扶助 제도를 들고 있다.³³⁾

복지란 국민 누구나 가난, 질병, 재해 등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말하며 소득 재분배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하위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社會科의 단원은 다음과 같다.(〈表 8〉 참조)

〈表 8〉 중학교 社會科 소득분배 내용 관련 단원

단원 학년	대 단 원	소 단 원
2 학 년	VI. 인간과 경제생활	1. 생활과 경제 (1) 경제 생활의 기본 문제 0 경제의 기본 문제 (2) 경제 문제의 해결 0 기본 문제의 해결 방법 2. 가정과 경제 활동 (2) 가계의 생산 활동 0 가계의 소득과 그 종류
3 학 년	II. 국민경제의 순환 과 발전 III. 우리나라의 경제 IV. 현대사회의 성격 과 우리의 생활	3. 정부의 경제 활동 (3) 재정과 국민 생활 0 복지 재정 4. 우리 경제의 과제와 전망 (1) 우리나라 경제의 과제 3. 현대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 4. 복지 사회의 실현

33)교육부(1994), 「중학교 사회 3」,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pp.53-54, pp.119-121.

2학년 教科書의 경우, “경제의 기본 문제”와 “기본 문제의 해결 방법”이란 주제에서 생산물의 합당한 분배와 경제 활동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 정책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계의 소득과 그 종류”에서 가계소득으로 근로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과정과 방법을 나열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가계는 재산 소득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³⁴⁾---’이라는 설명 뿐, 소득 불균등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학년의 경우에는 “복지 재정”에서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과 복지 재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서술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에서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 고도성장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예를 들었으며, 이의 해결 방안으로 재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예를 들고 있다. 또, 경제 영역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라는 소단원에서 사회갈등의 시각으로 계층간 빈부 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빈부 격차 해소의 필요성과 분배 의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복지 사회의 실현”이란 소단원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2학년 과정에서는 微視的인 입장에서, 그리고 3학년 과정에서는 巨視的인 입장에서 소득 분배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34)교육부(1994), 「중학교 사회 2」,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p.249.

Ⅲ. 結果 및 論議

1. 本研究의 기초 자료 내용

本研究의 조사 도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先行 研究들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확정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응답자의 배경에 관한 문항 5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문항 7개,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문항 7개, 교과서의 소득분배 내용에 관련한 문항 3개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중학교 3학년 학생³⁵⁾ 1,0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교육 통계연보(1993)를 사용하여 제주도 전체 中 3 학생을 학생의 인구 비례에 따라 각 행정 구역별로 표본수를 할당했으며,³⁶⁾ 조사 대상 학교는 제주시 5개교, 서귀포시와 북제주군 각 3개교, 남제주군 2개교로 총 13개교를 무작위 표집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5년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당학교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 회수하였는데 총 1,070부를 배부해서 1,043부를 회수하여, 97.48%의 회수율을 보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은 <表 9>와 같다.

질문지의 응답 결과를 통계처리하기 위해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 응답에 누락되거나, 한 문항에 2개 이상의 답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40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 대상은 1,003명이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다음 <表 10>과 같다.

35) 조사 대상을 3학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이들이 2,3학년 社會 敎科書에서 경제 단원을 학습하여 기본적인 경제지식과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6) 제주도 교육청(1993), 「제주교육통계연보」.
1993년 현재 제주도 中 3 학생수는 총 8,716명이며, 이 중 제주시는 3,901명, 서귀포시 1,498명, 북제주 1,613명, 남제주군 1,40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9〉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거 주 지 별				성 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남	여	
배 부	457	242	210	161	557	513	1070
회 수	454	222	210	157	534	509	1043
제외수	18	10	8	4	22	18	40
유효한수	436	212	202	153	512	491	1003
회수율(%)	99.34	91.74	100.00	97.52	95.87	99.22	97.48

〈表 10〉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배경 변인	변인 구성	변인 크기	변인구성비(%)	계
1. 성 별	남	512	51.0	1003
	여	491	49.0	
2. 지역별	도 시	648	64.6	1003
	읍, 면	355	35.4	
3.보호자 직업별	공무원(교사)	124	12.4	1003
	회 사 원	110	11.0	
	상업,서비스업	318	31.7	
	농업·어업	436	43.5	
4.보호자 학력별	무 직	15	1.5	1003
	중졸 이하	335	33.4	
	고 졸	557	55.5	
5.생활정도	대졸 이상	111	11.1	1003
	상 류 층	21	2.1	
	중 류 층	894	89.1	
	하 류 층	88	8.8	

수집된 자료는 SPSS-X에 의해 통계 처리하였다. 산출 자료는 각 배경변인별로 나누어 응답 내용의 頻度와 百分率을 산출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반응 분포를 살펴 보았으며,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 經濟 全般에 대한 意識

학교 경제교육에서 미래 경제 주체인 학생들이 “학생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本領域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本研究의 목적인 소득분배 문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경제 발전의 단계, 경제 발전의 주체, 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7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반응 결과는 우선 각 문항별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결과를 제시하고,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를 분석했으며, 이들 결과를 先行 研究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1) 경제의 발전 단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시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제적 발전 단계를 임의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는 <表 11>에서 보듯이 ① 선진국 단계(1.7%) ② 선진국 진입 단계(43%) ③ 중진국 단계(41.5%) ④ 중진국 진입 단계(9.5%) ⑤ 후진국 단계(4.4%)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 1003명 중에서 448명(44.7%)이 우리 경제를 선진국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1992년 金龍河가 서울시내 中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³⁷⁾(선진국 단계 2.5%, 선진국 진입 단계 29.5%)와 비교해 볼 때, 3년 전보다 12.7% 더 많은 중학생들이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라와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당 GNP 기준으로 선진국은 \$ 6,000 이상, 중진국은 \$ 600에서 \$ 6,000 사이,

37) 金龍河(1992), 前掲書, pp. 47-48.

〈表 11〉 경제 발전 단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3 (100)				17 (1.7)	431 (43.0)	416 (41.5)	95 (9.5)	44 (4.4)
성별	남	512 (51.0)	8.4525	4	0.0763	5 (1.0)	228 (44.5)	209 (40.8)	42 (8.2)	28 (5.5)
	여	491 (49.0)				12 (2.4)	203 (41.3)	207 (42.2)	53 (10.8)	16 (3.3)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3.6925	4	0.4492	9 (1.4)	276 (42.6)	276 (42.6)	63 (9.7)	24 (3.7)
	읍·면지구	355 (35.4)				8 (2.3)	155 (43.7)	140 (39.4)	32 (9.0)	20 (5.6)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23.9473	16	0.0907	1 (0.8)	56 (45.2)	53 (42.7)	7 (5.6)	7 (5.6)
	회사원	110 (11.0)				3 (2.7)	49 (44.5)	40 (36.4)	15 (13.6)	3 (2.7)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 (0.3)	141 (44.3)	138 (43.4)	27 (8.5)	11 (3.5)
	농·어업	436 (43.5)				11 (2.5)	182 (41.8)	175 (40.2)	46 (10.6)	21 (4.8)
	무직	15 (1.5)				3 (20.0)	10 (66.7)		2 (13.3)	
보호자 학력별	중졸 이하	335 (33.4)	4.1283	8	0.8454	7 (2.1)	133 (39.7)	148 (44.2)	33 (9.9)	14 (4.2)
	고졸	557 (55.5)				9 (1.6)	249 (44.7)	225 (40.4)	51 (9.2)	23 (4.1)
	대졸 이상	111 (11.1)				9 (0.9)	49 (44.1)	43 (38.7)	11 (9.9)	7 (6.3)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15.5603	8	0.0491	2 (9.5)	11 (52.4)	5 (23.8)	2 (9.5)	1 (4.8)
	중류층	894 (89.1)				12 (1.3)	387 (43.3)	375 (41.9)	80 (8.9)	40 (4.5)
	하류층	88 (8.8)				3 (3.4)	33 (37.5)	36 (40.9)	13 (14.8)	3 (3.4)

* P < 0.05

그리고 후진국은 \$ 600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³⁸⁾ 우리나라는 '93년에 이미 1인당 GNP가 7천 달러에 이르렀고, 로스토우(Walt W.Rostow)교수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위상이 최근까지 세계 시장에 수출입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전혀 못미치는 '다수의 소규모 경쟁국'중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소수의 대규모 경쟁국'의 하나로 격상되었다고 한다.³⁹⁾ 우리나라는 고소득 중진국의 단계를 지나 선진국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중진국 단계 혹은 그 이하로 보는 학생들이 55.4%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적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사회행평이나 환경문제, 국민의식 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배경변인별로는 경제적 계층별에서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상류층, 중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학생들은 선진국 진입 단계에 (각각 52.4%, 43.3%)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하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중진국 단계에 가장 많은 응답(40.9%)을 하여, 가계의 경제 수준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선진국 진입 단계(44.5%)에, 여학생은 중진국 단계(42.2%)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으며, 거주지별로는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읍·면 지구 학생들이(43.7%) 시지구 학생들(42.6%)보다 선진국 진입 단계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대부분 선진국 진입 단계에 가장 높은 반응률을 보였는데, 부모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한 학생들은 중진국 단계(66.7%)에 높은 응답을 하였고, 보호자 학력별로 중졸 이하는 중진국 단계에, 고졸과 대졸 이상은 선진국 진입 단계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8)宋丙洛(1994), 前掲書, p.23.

39)上掲書, pp.9-11.

2) 경제 발전의 주체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발전의 모델 국가로 비쳐질 만큼 우리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宋丙洛은 성장 지향적, 공업 지향적, 대외 지향적 전략(GIO 전략)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는데⁴⁰⁾ 정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에 꾸준히 협조한 기업, 근로자 모두가 경제성장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表 12>에서와 같이 ① 근로자(72.4%) ② 기업(15.2%) ③ 정부(9.7%) ④ 외국(3.0%)으로 나타났다.

1988년에 貯蓄推進中央委員會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근로자(80.7%), 정부(9.1%), 기업가(7.9%), 다른 나라(2.3%)순으로 나타났고⁴¹⁾, 金龍河의 조사결과는 근로자 77.3%, 기업 12.3%, 정부 5.5%, 외국원조 4.8%로 나타났다⁴²⁾. 대부분의 학생들이 근로자의 공헌을 높게 평가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에서 $P < 0.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공헌자로서 근로자를 택한 남학생이 67.2%인 반면, 여학생은 77.4%가 응답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근로자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경제 발전에 여성 근로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여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별로는 거의 유사한 응답을 했으며, 근로자를 경제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공헌자로 보고 있다는 응답을 보호자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84.5%), 상업(71.4%), 농·어업(70.3%), 공무원(67.7%)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고졸, 중졸 이하, 대졸 이상 순으로,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순으로 나타

40) 上掲書, p. 63.

41) 貯蓄推進中央委員會(1989), 「初·中學生 經濟意識 調査」, p. 30.

42) 金龍河(1992), 前掲書, p. 52.

〈表 12〉 경제 발전의 주체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1,003 (100)				724 (72.4)	152 (15.2)	97 (9.7)	30 (3.0)
성별	남	512 (51.0)	13.7462	3	** 0.0033	344 (67.2)	92 (18.0)	56 (10.9)	20 (3.9)
	여	491 (49.0)				380 (77.4)	60 (12.2)	41 (8.4)	10 (2.0)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0.3021	3	0.9596	468 (72.2)	99 (15.3)	63 (9.7)	18 (2.8)
	읍.면지구	355 (35.4)				256 (72.1)	53 (14.9)	34 (9.6)	12 (3.4)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9.8992	12	0.0690	84 (67.7)	23 (18.5)	12 (9.7)	5 (4.0)
	회사원	110 (11.0)				93 (84.5)	13 (11.8)	4 (3.6)	
	상업 (서비스업)	318 (31.7)				227 (71.4)	54 (17.0)	29 (9.1)	8 (2.5)
	농.어업	436 (43.5)				306 (70.3)	62 (14.3)	51 (11.7)	16 (3.7)
	무직	15 (1.5)				13 (86.7)		1 (6.7)	1 (6.7)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8.0142	6	0.2371	241 (71.9)	46 (13.7)	41 (12.2)	7 (2.1)
	고졸	557 (55.5)				407 (73.1)	83 (14.9)	48 (8.6)	19 (3.4)
	대졸 이상	111 (11.1)				76 (68.5)	23 (20.7)	8 (7.2)	4 (3.6)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6.2668	6	0.3940	16 (76.2)	1 (4.8)	3 (14.3)	1 (4.8)
	중류층	894 (89.1)				648 (72.5)	137 (15.3)	81 (9.1)	28 (3.1)
	하류층	88 (8.8)				60 (68.2)	14 (15.9)	13 (14.8)	1 (1.1)

** P < 0.005

났다. 보호자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고(20.7%), 정부에는 비판적인(7.2%) 입장을 보였으며 하류층 학생이 중,상류층 학생보다 근로자의 공헌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3) 산업 구조의 개편

경제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산업구조도 변화하게 마련이고, 변화해야만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WTO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필연적이다.

학생들은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려면 어느 산업의 발전이 강화 되어야 하겠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는 <表 13>에서 보는 것처럼 ① 농림·수산업(21.3%) ② 광업·공업(28.9%) ③ 서비스업(49.8%)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金龍河의 조사 결과(농림·수산업 16.4%, 광업·공업 60.7%, 기타 서비스업 22.9%)⁴³⁾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산업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광공업, 즉 2차 산업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데 반해, 제주 지역 학생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것은 제주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응답한 결과로 보인다.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관광을 중심으로한 서비스업이 제주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산업구조의 개편은 경제성장의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는 국제경쟁의 시대이므로 산업구조 개편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에 한정된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는 서비스산업중

43) 上掲書, p. 54.

〈表 13〉 산업 구조의 개편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214 (21.3)	290 (28.9)	499 (49.8)
성별	남	512 (51.0)	10.4081	3	*	91 (17.8)	152 (29.7)	269 (52.5)
	여	491 (49.0)				123 (25.1)	138 (28.1)	230 (46.8)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11.2886	3	*	123 (19.0)	201 (31.0)	324 (50.0)
	읍.면지구	355 (35.4)				91 (25.6)	89 (25.1)	175 (49.3)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5.0248	12	0.2401	19 (15.3)	37 (29.8)	68 (54.8)
	회사원	110 (11.0)				23 (20.9)	34 (30.9)	53 (48.2)
	상업 (서비스업)	318 (31.7)				577 (17.9)	101 (31.8)	160 (50.3)
	농.어업	436 (43.5)				108 (24.8)	115 (26.4)	212 (48.8)
	무직	15 (1.5)				6 (40.0)	3 (20.0)	6 (40.0)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7.6814	6	0.2624	76 (22.7)	85 (25.4)	174 (51.9)
	고졸	557 (55.5)				118 (21.2)	168 (30.2)	271 (48.7)
	대졸 이상	111 (11.1)				20 (18.0)	37 (33.3)	54 (48.6)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5.5379	6	0.4769	4 (19.0)	4 (19.0)	13 (61.9)
	중류층	894 (89.1)				184 (20.6)	262 (29.3)	448 (50.1)
	하류층	88 (8.8)				26 (29.5)	24 (27.3)	38 (43.2)

* P < 0.05

성장이 특히 빠르게 이루어질 연구개발(R&D) 관련 산업을 분리하여 제 4차 산업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⁴⁴⁾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관련산업의 성장이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성별, 거주지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서비스업에 응답한 남학생이 52.5%, 여학생이 46.8%이고, 농림·수산업에는 남학생이 17.8%, 여학생이 25.1% 응답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시지구 학생들이 서비스업(50.0%), 광업·공업(31.0%), 농림·수산업(19.0%)순으로 응답한 반면, 읍·면 지구 학생들은 서비스업(49.3%), 농림·수산업(25.6%), 광업·공업(25.1%) 순으로 응답해 읍·면 지구 학생들이 1차 산업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1차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하였고,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1차 산업의 위기에 대한 농촌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 상업, 농·어업, 회사원, 무직 순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순으로,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순으로 서비스업에 응답했다.



4)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관

미래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는 ① 낙관적이다(33.2%) ② 그저 그렇다(51.6%) ③ 비관적이다(15.2%)로 나타났고,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表 14〉 참조)

1988년 貯蓄推進中央委員會가 실시한 미래의 經濟觀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 크게 늘어나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설문에 중학생의 81.1%가 “매우 그렇다”(46.3%), “대체로 그렇다”(34.8%)로 응답, 낙관적으로

44)宋丙洛(1994), 前掲書, p. 425.

< 表 14 >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관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333 (33.2)	518 (51.6)	152 (15.2)
성별	남	512 (51.0)	1.4265	2	0.4901	176 (34.4)	255 (49.8)	81 (15.8)
	여	491 (49.0)				157 (32.0)	263 (53.6)	71 (14.5)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4.9975	2	0.0822	200 (30.9)	350 (54.0)	98 (15.1)
	읍·면지구	355 (35.4)				133 (37.5)	168 (47.3)	54 (15.2)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3.8638	8	0.8692	39 (31.5)	64 (51.6)	21 (16.9)
	회사원	110 (11.0)				38 (34.5)	56 (50.9)	16 (14.5)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09 (34.3)	164 (51.6)	45 (14.2)
	농·어업	436 (43.5)				140 (32.2)	225 (51.7)	70 (16.1)
	무직	15 (1.5)				6 (40.0)	9 (60.0)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5.0524	4	0.2820	110 (32.8)	175 (52.2)	50 (14.9)
	고졸	557 (55.5)				196 (35.2)	279 (50.1)	82 (14.7)
	대졸 이상	111 (11.1)				27 (24.3)	64 (57.7)	20 (18.0)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3.6952	4	0.4488	5 (23.8)	13 (61.9)	3 (14.3)
	중류층	894 (89.1)				293 (32.8)	467 (52.2)	134 (15.0)
	하류층	88 (8.8)				35 (39.8)	38 (43.2)	15 (17.0)

전망한 것이 압도적이었는데⁴⁵⁾, 1992년 金龍河의 조사에서는 “다소 비관적이다” (44.8%), “매우 비관적이다” (15.1%), “그저 그렇다” (24.7%)로 응답, 84.6%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었다⁴⁶⁾.

本調査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부정적 시각이 66.8%로 '92년 조사 결과 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다. 이는 경제적 형평에 대한 요구들이 미흡하나마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계속되는 개방 압력속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 미래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별로는 남학생(34.4%)이 여학생(32.0%)보다 미래경제를 낙관하고 있고, 거주지별로 시지구보다 읍·면지구가, 경제적으로 상류층보다 중,하류층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 계층이랄 수 있는 읍·면지구나 중, 하류층 학생들이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경제 상황을 희망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보호자의 자녀들(18.0%)이 저학력 보호자의 자녀들(14.9%)보다 미래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이 나타났다.

5) 경제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전체적인 반응 결과가 ① 있다(85.1%) ② 없다(1.9%) ③ 모르겠다(13.0%)로 나타났다.(<表 15-1> 참조) 경제적 계층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장애 요소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하류층은 88.6%, 중류층은 85.2%, 상류층은 66.7%, 장애요소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류층 2.0%, 하류층 1.1%, 상류층 0%로 나타나 중,하류층 학생들이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응답한 8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

45)貯蓄推進中央委員會(1989), 前掲書, p. 10.

46)金龍河(1992), 前掲書, p. 49.

< 表 15-1 > 경제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854 (85.1)	19 (1.9)	130 (13.0)
성별	남	512 (51.0)	4.3812	4	0.3569	429 (83.8)	9 (1.8)	74 (14.5)
	여	491 (49.0)				425 (86.6)	10 (2.0)	56 (11.4)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2.9222	4	0.5709	556 (85.8)	12 (1.9)	80 (12.3)
	읍·면지구	355 (35.4)				298 (83.9)	7 (2.0)	50 (14.1)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0.3691	16	0.8467	109 (87.9)	3 (2.4)	12 (9.7)
	회사원	110 (11.0)				97 (88.2)	2 (1.8)	11 (10.0)
	상업 (서비스업)	318 (31.7)				274 (86.2)	7 (2.2)	37 (11.6)
	농·어업	436 (43.5)				362 (83.0)	6 (1.4)	68 (15.6)
	무직	15 (1.5)				12 (80.0)	1 (6.7)	2 (13.3)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8.4907	8	0.3871	278 (83.0)	7 (2.1)	50 (15.0)
	고졸	557 (55.5)				482 (86.5)	12 (2.2)	63 (11.3)
	대졸 이상	111 (11.1)				94 (84.7)		17 (15.3)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19.3207	8	0.0132	14 (66.7)		7 (33.3)
	중류층	894 (89.1)				762 (85.2)	18 (2.0)	114 (12.8)
	하류층	88 (8.8)				78 (88.6)	1 (1.1)	9 (10.2)

* P < 0.05

계 발전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 요소를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했더니 ① 소득분배 문제(16.0%) ② 물가 상승 문제(16.5%) ③ 무역 마찰 문제(11.1%) ④ 노사 갈등 문제(7.8%) ⑤ 환경 오염 문제(30.5%) ⑥ 기타(3.4%)로 나타나 학생들이 환경 오염 문제를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⁴⁷⁾(〈表 15-2〉 참조)

최근 환경 문제는 전세계적인 관심사로서, 인간 생활의 모든 부문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산업 사회의 가장 큰 부작용이 자연의 훼손이라면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환경 오염 비용의 추가가 당연스럽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들이 환경 오염 문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지금까지 기업들이 정부의 보호아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경제 활동은 환경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소득분배 문제는 물가 상승에 이어 세번째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기타에 응답한 학생중에는 과소비와 정치적 요소와 관련한 경제적 부정·비리를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로 꼽은 학생이 많았다. 이외에 제품의 질 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책임감 부족, 국민들의 의식 문제, 집단 이기주의, 남북 분단 상황, 정부의 무능력, 대기업의 횡포 등을 장애 요소로 꼽았다.

각 배경 변인별 의의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남학생(40.0%)이 여학생(31.7%)보다 더 환경 오염을 중시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문제는 여학생(21.4%)이 남학생(16.1%)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지구보다는 읍·면지구 학생이,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보다 고졸과 중졸 이하가, 경제적으로 중·하류층보다는 상류층 학생이 환경 오염을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로 여기는 경향이 높았고,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자 학력이 중졸 이하와 고졸보다 대졸 이상이, 상류층보다 중·하류층 학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7)金龍河의 조사에서는 물가 상승 문제(23.4%), 소비 과열 문제(19.1%), 소득 격차 문제(17.5%), 무역 적자 문제(15.5%), 환경 훼손 문제(12.0%)로 나타났다.

〈表 15-2〉 경제 발전에 대한 장애 요소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54 (100)				160 (18.7)	165 (19.3)	111 (13.0)	78 (9.1)	306 (35.8)	34 (4.0)
성별	남	428 (50.1)	9.8093	5	0.0808	69 (16.1)	76 (17.8)	56 (13.1)	42 (9.8)	171 (40.0)	14 (3.3)
	여	426 (49.9)				91 (21.4)	89 (20.9)	55 (12.9)	36 (8.5)	135 (31.7)	20 (4.7)
거주지별	시지구	557 (65.2)	3.9592	5	0.5553	105 (18.9)	108 (19.4)	77 (13.8)	56 (10.1)	189 (33.9)	22 (3.9)
	읍·면지구	297 (34.8)				55 (18.5)	57 (19.2)	34 (11.4)	22 (7.4)	117 (39.4)	12 (4.0)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09 (12.8)	27.3982	20	0.1244	24 (22.0)	23 (21.1)	18 (16.5)	10 (9.2)	28 (25.7)	6 (5.5)
	회사원	97 (11.4)				14 (14.4)	17 (17.5)	14 (14.4)	11 (11.3)	33 (34.0)	8 (8.2)
	상업 (서비스업)	275 (32.2)				43 (15.6)	50 (18.2)	36 (13.1)	32 (11.6)	102 (37.1)	12 (4.4)
	농·어업	360 (42.2)				74 (20.6)	74 (20.6)	42 (11.7)	25 (6.9)	138 (38.3)	7 (1.9)
	무직	12 (1.4)				4 (33.3)	1 (8.3)	1 (8.3)		5 (41.7)	1 (8.3)
보호자 학력별	중졸 이하	276 (32.3)	18.1921	10	0.0518	56 (20.3)	49 (17.8)	25 (9.1)	26 (9.4)	114 (41.3)	6 (2.2)
	고졸	484 (56.7)				83 (17.1)	100 (20.7)	70 (14.5)	41 (8.5)	168 (34.7)	22 (4.5)
	대졸 이상	94 (11.0)				21 (22.3)	16 (17.0)	16 (17.0)	11 (11.7)	24 (25.5)	6 (6.4)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14 (1.6)	8.05283	10	0.6237	1 (7.1)	1 (7.1)	2 (14.3)	1 (7.1)	9 (64.3)	
	중류층	762 (89.2)				142 (18.6)	147 (19.3)	101 (13.3)	72 (9.4)	270 (35.4)	30 (3.9)
	하류층	78 (9.1)				17 (21.8)	17 (21.8)	8 (10.3)	5 (6.4)	27 (34.6)	4 (5.1)

6)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성장 지향적 전략을 선택하여 量的인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급속한 量的 성장은 所得과 富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그 결과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분배 문제가 사회 문제로 표출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이 실제 소득분배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소수 집단이 누리는 富의 축적의 정당성에 의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한적이거나 각종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金融實名制 등을 도입했으며, 土地實名制도 고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한 결과 ①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정책(33.4%) ② 사회 형평을 위한 균형적인 분배 정책(56.4%) ③ 잘 모르겠다(10.2%)로 나타났다.(〈表 16〉 참조)

거주지별, 보호자 학력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가 나왔다. 거주지별로 반응 결과를 보면, 시지구 학생들 중 53.7%가 형평을 위한 분배 정책에, 36.3%가 지속적인 성장 정책에 응답했고, 읍·면 지구 학생들은 62.3%가 분배 정책에, 27.3%가 성장 정책에 응답, 도시보다 농촌 지역 학생이 상대적으로 분배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고, 2,3차 산업의 발전에는 1차 산업의 희생이 뒤따랐음에도 성장에 따른 혜택이 지역간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분배 정책에 응답한 학생이 중졸 이하가 62.4%, 고졸이 54.4%, 대졸 이상이 51.4%로 나타났고, 성장 정책에 응답한 학생은 중졸 이하 26.0%, 고졸 36.1%, 대졸 이상 39.6%로 나타났다.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분배보다 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경제 정책 방향은 분배에 모아져야 한다는 응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았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농·어업, 공무원, 상업, 회사원, 무직 순으로, 경제적 계층별로는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순으로 분배 정책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최소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두 마

< 表 16 >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335 (33.4)	566 (56.4)	102 (10.2)
성별	남	512 (51.0)	3.1388	3	0.3707	178 (34.8)	283 (55.3)	51 (10)
	여	491 (49.0)				154 (31.4)	284 (58.2)	51 (10.4)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8.3516	3	*	235 (36.3)	348 (53.7)	65 (10.0)
	읍·면지구	355 (35.4)				97 (27.3)	221 (62.3)	37 (10.4)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4.3796	12	0.2771	41 (33.1)	70 (56.5)	13 (10.5)
	회사원	110 (11.0)				47 (42.7)	53 (48.2)	10 (9.1)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13 (35.5)	177 (55.7)	28 (8.8)
	농·어업	436 (43.5)				127 (29.1)	262 (60.1)	47 (10.8)
	무직	15 (1.5)				4 (26.7)	7 (46.7)	4 (26.7)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13.7840	6	*	87 (26.0)	209 (62.4)	39 (11.6)
	고졸	557 (55.5)				201 (36.1)	303 (54.4)	53 (9.5)
	대졸 이상	111 (11.1)				44 (39.6)	57 (51.4)	10 (9.0)
경제적계층별	상류층	21 (2.1)	6.4084	6	0.3790	8 (38.1)	11 (52.4)	2 (9.5)
	중류층	894 (89.1)				301 (33.7)	498 (55.7)	95 (10.6)
	하류층	88 (8.8)				23 (26.1)	60 (68.2)	5 (5.7)

* P < 0.05

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정책은 그 자체가 公平性을 저해하는 요인을 안고 있었다. 즉, 우리 경제는 분배 상태의 악화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성장이라는 과실을 딸 수 있었던 것이다.⁴⁸⁾ 경제 성장은 행복한 생활을 위해 꾸준히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왔던 분배 문제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3. 所得分配 問題에 대한 意識

김경모는 소득분배 개념의 분석틀로서 機能的 분배 이론 및 階層別 분배 이론과 관련한 사실 인지 영역과 分配正義論과 관련한 가치 판단관련 인지 영역을 제시했다.⁴⁹⁾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분배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에 대한 가치 판단의 정당화 문제까지 포함한다.

本研究의 중심 과제인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에 걸쳐 조사 분석하였다.

1) 빈곤 계층에 대한 책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해, 학생들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현실관이 어떠한지 알아 보았다. <表 17>에 의하면 빈곤 계층 존속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지역 사회(29.6%), 本人(19.9%), 가족·조상(3.7%)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表 12>의 경제 발전에 대한 공헌도 조사에서 정부의 역할에 9.7%만이 응답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

48)李俊求(1992), 前掲書, p. 486.

49)김경모(1993), 前掲書, p. 55.

<表 17> 빈곤 계층에 대한 책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1,003 (100)				200 (19.9)	37 (3.7)	297 (29.6)	469 (46.8)
성별	남	512 (51.0)	12.1326	3	*** 0.0069	106 (20.7)	28 (5.5)	156 (30.5)	222 (43.4)
	여	491 (49.0)				94 (19.1)	9 (1.8)	141 (28.7)	247 (50.3)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5.4679	3	0.1406	136 (21.0)	19 (2.9)	183 (28.2)	310 (47.8)
	읍.면지구	355 (35.4)				64 (18.0)	18 (5.1)	114 (32.1)	159 (44.8)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3.6952	12	0.3206	21 (16.9)	6 (4.8)	34 (27.4)	63 (50.8)
	회사원	110 (11.0)				23 (20.9)	7 (6.4)	26 (23.6)	54 (49.1)
	상업 (서비스업)	318 (31.7)				70 (22.0)	6 (1.9)	95 (29.9)	147 (46.2)
	농.어업	436 (43.5)				86 (19.8)	17 (3.9)	137 (31.5)	195 (44.8)
	무직	15 (1.5)				1 (6.7)	5 (33.3)	9 (60.0)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2.0149	6	0.9183	67 (20.0)	12 (3.6)	102 (30.4)	154 (46.0)
	고졸	557 (55.5)				110 (19.7)	19 (3.4)	167 (30.0)	261 (46.9)
	대졸 이상	111 (11.1)				23 (20.7)	6 (5.4)	28 (25.2)	54 (48.6)
경제적계층별	상류층	21 (2.1)	7.5020	6	0.2769	2 (9.5)	1 (4.8)	8 (38.1)	10 (47.6)
	중류층	894 (89.1)				182 (20.4)	29 (3.2)	267 (29.9)	416 (46.5)
	하류층	88 (8.8)				1 (16)	2 (7)	3 (22)	4 (43)

*** P < 0.01

다.

성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은 빈곤에 대한 책임이 본인 20.7%, 가족·조상 5.5%, 지역 사회 30.5%, 정부 43.4%로 응답했고, 여학생은 본인 19.1%, 가족·조상 1.8%, 지역 사회 28.7%, 정부 50.3%로 응답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정부에 책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시지구 학생이 정부에 47.8%, 지역 사회에 28.2%, 본인에 21.0%, 가족조상에 2.9% 응답했고, 읍·면 지구 학생이 정부에 44.8%, 지역 사회에 32.1%, 본인 18.0%, 가족·조상에 5.1% 응답하였다. 읍·면 지구 학생이 시지구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사회와 가족·조상에게 빈곤의 책임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가난의 책임을 정부에 가장 많이 돌리고 있고, 지역 사회에는 농·어업 계층이, 본인에는 상업 계층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2) 경제적 성공 요소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表 18>과 같이 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10.2%) ② 본인의 노력(82.5%) ③ 학연 및 지연(6.9%) ④ 기타(0.5%)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공 요소로 본인의 노력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가치지향은 우리의 경제체제가 자유시장경제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보호자 직업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직업별로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부모가 무직인 학생들은 본인의 노력에 66.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20.0% 응답했다. 그리고 상업과 농·어업(각각 85.2%, 83.0%) 집단의 학생보다 공무원(78.2%)과 회사원(79.1%) 집단의 학생이 본인의 노력에 상대적으로 덜 응답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연 및 지연에는 상업과 농·

<表 18> 경제적 성공 요소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 체		1,003 (100)				102 (10.2)	827 (82.5)	69 (6.9)	5 (0.5)
성 별	남	512 (51.0)	2.6364	3	0.4511	53 (10.4)	426 (83.2)	32 (6.3)	1 (0.2)
	여	491 (49.0)				49 (10.0)	401 (81.7)	37 (7.5)	4 (0.8)
거 주 지 별	시지구	648 (64.6)	3.2173	3	0.3593	62 (9.6)	535 (82.6)	49 (7.6)	2 (0.3)
	읍.면지구	355 (35.4)				40 (11.3)	292 (82.3)	20 (5.6)	3 (0.8)
보 호 자 직 업 별	공무원 (교사)	124 (12.4)	22.7906	12	0.0296	13 (10.5)	97 (78.2)	14 (11.3)	
	회사원	110 (11.0)				13 (11.8)	87 (79.1)	9 (8.2)	1 (0.9)
	상업 (서비스업)	318 (31.7)				31 (9.7)	271 (85.2)	16 (5.0)	
	농.어업	436 (43.5)				42 (9.7)	361 (83.0)	29 (6.7)	3 (0.7)
	무직	15 (1.5)				3 (20.0)	10 (66.7)	1 (6.7)	1 (6.7)
보 호 자 학 력 별	중졸이하	335 (33.4)	7.5504	6	0.2729	31 (9.3)	281 (83.9)	20 (6.0)	3 (0.9)
	고졸	557 (55.5)				62 (11.1)	457 (82.0)	36 (6.5)	2 (0.4)
	대졸 이상	111 (11.1)				9 (8.1)	89 (80.2)	13 (11.7)	
경 제 적 계 층 별	상류층	21 (2.1)	6.4498	6	0.3747	5 (23.8)	15 (71.4)	1 (4.8)	
	중류층	894 (89.1)				85 (9.5)	742 (83.0)	62 (6.9)	5 (0.6)
	하류층	88 (8.8)				12 (13.6)	70 (79.5)	6 (6.8)	

* P < 0.05

어업 직업을 가진 부모의 자녀보다 더 많은 응답을 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성공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학연 및 지연 등의 배경이 능력 못지 않게 중시되는 잘못된 우리 사회구조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83.2%)이 여학생(81.7%)보다 더 본인의 노력을 중시했고, 거주지별로는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본인의 노력에 중추가하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는 고졸이, 학연 및 지연에는 대졸 이상이 각각 가장 많이 반응했으며, 경제적 계층별로 상류층보다 중,하류층이 본인의 노력을 중시한 반면, 상류층 학생(23.8%)은 중,하류층 학생(9.5%)에 비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3)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인식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해도 분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지속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된다.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 사회 성원들의 인식이 어떠한 지를 알았을 때 그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분배 사실과 국민의 현실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교육과 합리적 이해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분배 상황을 올바르게 주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전체적인 반응 결과가 ① 공평하다(4.6%) ② 그저 그렇다(42.5%) ③ 불공평하다(52.9%)로 나타났다.<表 19-1> 참조) 金龍河의 조사 결과는 공평하다가 8.1%, 그저 그렇다가 14.9%, 불공평하다가 77.1%였다⁵⁰⁾. 두 조사 결과만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서울 시내 학생보다 제주도 학생들이 소득분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나 공평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전체의 4.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분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0)金龍河(1992), 前掲書, p. 61.

< 表 19-1>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46 (4.6)	426 (42.5)	531 (52.9)
성별	남	512 (51.0)	3.9854	3	0.2630	30 (5.9)	212 (41.4)	270 (52.7)
	여	491 (49.0)				16 (3.3)	214 (43.6)	261 (53.2)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8.3036	3	0.0401*	28 (4.3)	295 (45.5)	325 (50.1)
	읍·면지구	355 (35.4)				18 (5.1)	131 (36.9)	206 (58.0)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20.6706	12	0.0554	4 (3.2)	49 (39.5)	71 (57.3)
	회사원	110 (11.0)				7 (6.4)	55 (50.0)	48 (43.6)
	상업 (서비스업)	318 (31.7)				9 (2.8)	151 (47.5)	158 (49.1)
	농·어업	436 (43.5)				26 (6.0)	163 (37.4)	247 (56.7)
	무직	15 (1.5)				7 (46.7)	8 (53.3)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4.1749	6	0.6530	19 (5.7)	135 (40.3)	181 (54.0)
	고졸	557 (55.5)				25 (4.5)	244 (43.8)	288 (51.7)
	대졸 이상	111 (11.1)				2 (1.8)	47 (42.3)	62 (55.9)
경제적계층별	상류층	21 (2.1)	3.9655	6	0.6813		8 (38.1)	13 (61.9)
	중류층	894 (89.1)				43 (4.8)	386 (43.2)	465 (52.0)
	하류층	88 (8.8)				3 (3.4)	32 (36.4)	53 (60.2)

* P < 0.05

다.

한국인은 소득, 재산, 생활환경 등의 면에서 강한 공동체적 평준화 사상을 갖는다고 한다. 宋復은 이러한 한국인의 평준화 사상을 '均사상'이라 하였고, 宋丙洛은 '均霑사상'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격차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한·일 민족의 비교연구가인 金容雲에 의하면 한국인은 잘 사는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을 보면 '한턱내라'는 식의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는 남의 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국민의 불평등 의식을 심화시킨다고 하였다.⁵¹⁾ 그러나 소득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해서라기 보다 일부 집단의 축적 과정이 비생산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즉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인해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했고, 공업화를 위한 농업의 희생,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재산소득의 격차 등 노력과 경쟁을 통하지 않은 富의 축적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한 富의 축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의 공동체적 형평을 존중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윤리는 物的 富의 증가에 맞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⁵²⁾ 학생들에게도 소득분배의 상황과 관련하여 올바른 재산관과 경제윤리를 확립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통계상으로는 거주지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시지구 학생(50.1%)보다 읍·면 지구 학생들(58.0%)이 더 소득 분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녀가 '불공평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농·어업, 상업, 회사원 순으로 응답했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5.9%)이 '불공평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51) 宋丙洛(1994), 前掲書, p. 654.

52) 上掲書, p. 316.

< 表 19-2>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350 (34.9)	621 (51.9)	132 (13.2)
성별	남	512 (51.0)	10.9615	3	* 0.0119	157 (30.7)	280 (54.7)	75 (14.6)
	여	491 (49.0)				193 (39.3)	241 (49.1)	57 (11.6)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4.2350	3	0.2372	223 (34.4)	336 (51.9)	895 (13.7)
	읍.면지구	355 (35.4)				127 (35.8)	185 (52.1)	43 (12.1)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8.1501	12	0.7733	44 (35.5)	65 (52.4)	15 (12.1)
	회사원	110 (11.0)				37 (33.6)	59 (53.6)	14 (12.7)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14 (35.8)	172 (54.1)	32 (10.1)
	농.어업	436 (43.5)				150 (34.5)	218 (50)	68 (15.6)
	무직	15 (1.5)				5 (33.3)	8 (53.3)	2 (13.3)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3.1582	6	0.7887	119 (35.5)	173 (51.6)	43 (12.8)
	고졸	557 (55.5)				200 (35.9)	284 (51.0)	73 (13.1)
	대졸이상	111 (11.1)				31 (27.9)	64 (57.7)	16 (14.4)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3.0782	6	0.7990	5 (23.8)	12 (57.1)	43 (19.0)
	중류층	894 (89.1)				319 (35.7)	460 (51.4)	115 (12.9)
	하류층	88 (8.8)				26 (29.5)	49 (55.7)	13 (14.8)

* P < 0.05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 하류층, 중류층 순으로 '불공평하다'에 응답했다. 상류층 학생들 중 '공평하다'에 응답한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불공평하다'에 61.9%나 응답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소득분배의 機能的 불균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반응이 ① 근로 소득의 격차(34.9%) ② 재산 소득의 격차(51.9%) ③ 잘 모르겠다(13.2%)로 나타났다. (<表 19-2> 참조) 일반적으로 소득분배 문제는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학생들은 재산소득의 격차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전체의 51.9%로 나타나 일반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근로소득의 격차(34.9%)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재산 소득의 격차를 더 심각하게 여긴다는 학생이 남학생은 54.7%, 여학생은 49.1%, 근로 소득의 격차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학생이 남학생은 30.7%, 여학생은 39.3%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근로 소득의 격차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아직도 남녀간 임금 차이를 두고 있는 사회 현실에 관심을 둔 결과라 보아진다. 거주지별, 보호자 직업별로는 유사한 반응을 보였고,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이 재산소득의 격차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4) 근로소득의 격차 요인

근로소득의 격차 요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근로 소득의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전체적인 반응 결과는 <表 20>과 같이 ① 고졸·대졸 등 학력의 차이(41.6%) ② 생산직·사무직 등 직종의 차이(22.3%) ③ 중소·대기업 등 기업별 차이(12.3%) ④ 농촌·도시 등 지역의 차이(23.8%)로 나타났다.

근래에 학력별 임금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학력을 근로 소득 격차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학력중시 경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노동부에서 조사한 교육 정도별 임금 수준을 보면, 고졸 임금을 100으로 했을

〈表 20〉 근로 소득의 격차 요인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1,003 (100)				417 (41.6)	224 (22.3)	123 (12.3)	239 (23.8)
성별	남	512 (51.0)	9.3969	4	0.0519	233 (45.5)	113 (22.1)	62 (12.1)	104 (20.3)
	여	491 (49.0)				184 (37.5)	111 (22.6)	61 (12.4)	135 (27.5)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14.2383	4	*** 0.0066	271 (41.9)	154 (23.8)	90 (13.9)	133 (20.5)
	읍·면지구	355 (35.4)				146 (41.1)	70 (19.7)	33 (9.3)	106 (29.9)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51.7372	16	**** 0.0000	51 (41.1)	35 (28.2)	17 (13.7)	21 (16.9)
	회사원	110 (11.0)				38 (34.5)	21 (19.1)	21 (19.1)	30 (27.3)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38 (43.4)	80 (25.2)	50 (15.7)	50 (15.7)
	농·어업	436 (43.5)				186 (42.7)	85 (19.5)	34 (7.8)	131 (30.0)
	무직	15 (1.5)				4 (26.7)	3 (20.0)	1 (6.7)	7 (46.7)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20.7112	8	*** 0.0080	131 (39.1)	70 (20.9)	31 (9.3)	103 (30.7)
	고졸	557 (55.5)				236 (42.4)	125 (22.4)	81 (14.5)	115 (20.6)
	대졸 이상	111 (11.1)				50 (45.0)	29 (26.1)	11 (9.9)	21 (18.9)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6.2673	8	0.6173	10 (47.6)	3 (14.3)	2 (9.5)	6 (28.6)
	중류층	894 (89.1)				370 (41.4)	201 (22.5)	116 (13.0)	207 (23.2)
	하류층	88 (8.8)				37 (42.0)	20 (22.7)	5 (5.7)	26 (29.5)

*** P < 0.01

**** P < 0.001

때, 1975년도에 중졸 이하가 57.2, 초대졸이 136.2, 대졸 이상이 214.4였던 것이 1993년에는 중졸 이하가 88.1, 초대졸이 109.5, 대졸 이상이 161.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별 임금 수준을 보면 평균 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1975년 전문 기술직 198.1, 행정관리직 341.7, 사무직 160.1, 판매직 92.1, 서비스직 77.3, 농림 수산 및 수렵직 65.0, 생산직이 74.6이었던 것이 1992년에는 각각 127.2, 211.3, 102.2, 78.3, 69.3, 83.4, 83.9로 나타났다⁵³⁾. 통계상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학력별, 직종별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학력간 임금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여 사회의 잘못된 학력중시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각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를 보면, 거주지별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시지구 학생들은 소득 격차 요인을 순서대로 학력(41.9%), 직종(23.8%), 지역(20.5%), 기업별(13.9%)로 응답했고, 읍·면 지구 학생들은 학력(41.1%), 지역(29.9%), 직종(19.7%), 기업별(9.3%)로 응답, 읍·면 지구 학생들이 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더 농촌과 도시 등 지역의 차이를 소득 격차 요인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소득 격차 요인으로 학력을 꼽은 학생은 상업, 농·어업, 공무원, 회사원, 무직 순으로 나타났고, 농촌과 도시 등 지역을 꼽은 학생은 무직, 농·어업, 회사원, 공무원, 상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직업이 농·어업인 학생의 경우 30%가 근로 소득의 격차 요인을 농촌과 도시 등의 지역 차이로 응답함으로써, 부모의 뒤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을 것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서 앞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보호자 학력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보호자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에는 학력에 39.1%, 지역에 30.7%, 대졸일 경우에는 학력에

53)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pp. 73-79.

45.0%, 직종에 26.1%로 응답하였다. 이로써 거주지가 읍·면 지구이고, 보호자 직업이 농·어업,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 소득 격차 요인을 농촌과 도시 등 지역에서 찾으려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 농촌 사회에 큰 시사점을 준다. 즉 '移村向都'에 의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45.5%)이 여학생(37.5%)보다 근로 소득의 격차 요인으로 학력을 꼽았고, 농촌·도시 등 지역의 차이에는 여학생(27.5%)이 남학생(20.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이 학력의 차이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지역의 차이에는 하류층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5)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방법

소득분배의 불균등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축소시켜 버린다. 시장경제 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보장하지만, 각 개인의 경제 활동 능력의 차이, 교육기회의 차이, 상속재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득 격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 분배가 불균등하면 경쟁의 의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교육의 기회도 상실되어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人的 자원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이 요망되는 것이다.

소득분배 개선은 조세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 금융 실명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의해 가능하다. “소득 분배 개선 정책으로⁵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나?”는 물음에 전체적인 반응 결과가 ①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제도(26.5%) ②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 제도(14.3%) ③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8.5%) ④ 국민 연금 등 사회 보험 제도(34.8%) ⑤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

54)중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 II. 국민경제의 순환과 발전 단원 중
3. 정부의 경제 활동(pp. 53-54) 부분에서 소득 분배 개선책과 관련
되는 내용 5가지를 보기로 제시했다.

< 表 21>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방법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3 (100)				266 (26.5)	143 (14.3)	85 (8.5)	349 (34.8)	157 (15.7)	3 (0.3)
성별	남	512 (51.0)	7.9364	5	0.1598	137 (26.8)	75 (14.6)	50 (9.8)	183 (35.7)	66 (12.9)	1 (0.2)
	여	491 (49.0)				129 (26.3)	68 (13.8)	35 (7.1)	166 (33.8)	91 (18.5)	2 (0.4)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2.1280	5	0.8312	170 (26.2)	92 (14.2)	61 (9.4)	222 (34.3)	101 (15.6)	2 (0.3)
	읍·면지구	355 (35.4)				96 (27.0)	51 (14.4)	24 (6.8)	127 (35.8)	56 (15.8)	1 (0.3)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21.2605	20	0.3819	38 (30.6)	10 (8.1)	10 (8.1)	43 (34.7)	22 (17.7)	1 (0.8)
	회사원	110 (11.0)				38 (34.5)	14 (12.7)	7 (6.4)	34 (30.9)	17 (15.5)	
	상업 (서비스업)	318 (31.7)				74 (23.3)	57 (17.9)	32 (10.1)	113 (35.5)	41 (12.9)	1 (0.3)
	농·어업	436 (43.5)				114 (26.2)	58 (13.3)	34 (7.8)	155 (35.6)	74 (17.0)	1 (0.2)
	무직	15 (1.5)				2 (13.3)	4 (26.7)	2 (13.3)	4 (26.7)	3 (20.0)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12.2617	10	0.2679	85 (25.4)	49 (14.6)	21 (6.3)	126 (37.6)	54 (16.1)	3 (0.5)
	고졸	557 (55.5)				148 (26.6)	86 (15.4)	53 (9.5)	184 (33.0)	83 (14.9)	
	대졸 이상	111 (11.1)				33 (29.7)	8 (7.2)	11 (9.9)	39 (35.1)	20 (18.0)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10.4495	10	0.4020	5 (23.8)	2 (9.5)	3 (14.3)	9 (42.9)	2 (9.5)	3 (0.3)
	중류층	894 (89.1)				243 (27.2)	120 (13.4)	74 (8.3)	311 (34.8)	143 (16.0)	
	하류층	88 (8.8)				18 (20.5)	21 (23.9)	8 (9.1)	29 (33.0)	12 (13.6)	

제도(15.7%) ⑥ 기타(0.3%)로 나타났고, 배경변인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表 21〉 참조)

전체 응답 학생 중 34.8%가 사회보험 제도 정책을 통한 소득 분배 개선을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사회보험을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으로 파악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은 몇 가지에 한정될 수는 없고 경제 수준에 맞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조화롭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에서 '가격기구에 의한 분배'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보장한다 할지라도 형평성은 반드시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 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 의료, 교육 등 기본수요(basic needs) 충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기구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환경, 보건, 의료, 복지 등 사회형평(social equality)이나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관련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⁵⁵⁾.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국가에 있어서 경제적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역할도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호자 직업에 따라 공무원과 상업, 농·어업인 경우는 사회 보험을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았고, 회사원이 보호자인 학생들은 누진세 제도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꼽았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순으로 사회보험 제도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제도에는 중류층이,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 제도에는 하류층이 가장 많이 응답했다.

6) 소득 분배에 대한 미래관

앞으로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물음에 전체적인 반응 결과는 ① 나아

55)鄭正燾(1994), 前掲書, pp.178-179.

질 것이다(38.5%) ②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47.2%) ③ 나빠질 것이다(14.4%)로 나타났다.<表 22 > 참조) 언뜻 보기에 비관론보다 낙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도 조사문항(<表 19-1>)에서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52.9%가 나온 것을 상기한다면, 장래 소득 분배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47.2%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金龍河의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30.5%가 낙관적으로 미래 소득 분배를 전망했고, 35.5%가 비관적으로 전망했었다.⁵⁶⁾ 本調査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92년보다 미래 소득 분배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배경 변인별로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는데 남학생(40.0%)이 여학생(36.9%)보다 소득 분배 상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이(50.0%), 경제적 계층별로는 상류층(42.9%)이 미래 소득 분배를 가장 낙관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教科書 所得分配 內容에 대한 意識

社會科 教科書에서 소득 분배에 관한 내용은 독립 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2학년의 「인간과 경제 생활」 단원에서 1개의 독립 주제와 2개의 관련 주제로, 3학년의 「국민경제의 순환과 발전」, 「우리나라의 경제」, 「현대 사회의 성격과 우리의 생활」 단원에서 4개의 관련 주제로 소득분배 내용을 다루고 있다. 李貞淑은 경제교육의 11개 기본 개념별 교과서 비중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분배'가 전체의 2.3%에 불과함을 밝혔다.⁵⁷⁾ 그러나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소득 분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연결시켜 사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과서 소득분배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3문항을 제시해

56) 金龍河(1992), 前掲書, p. 65.

57) 李貞淑(1993), 前掲書, p. 59.

<表 22> 소득 분배에 대한 미래관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386 (38.5)	473 (47.2)	144 (14.4)
성별	남	512 (51.0)	5.7375	2	0.0568	205 (40.0)	224 (43.8)	83 (16.2)
	여	491 (49.0)				181 (36.9)	249 (50.7)	61 (12.4)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1.8238	2	0.4018	247 (38.1)	314 (48.5)	87 (13.4)
	읍·면지구	355 (35.4)				139 (39.2)	159 (44.8)	57 (16.1)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3.0329	8	0.1107	62 (50.0)	47 (37.9)	15 (12.1)
	회사원	110 (11.0)				34 (30.9)	60 (54.5)	16 (14.5)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26 (39.6)	146 (45.9)	46 (14.5)
	농·어업	436 (43.5)				161 (36.9)	211 (48.4)	64 (14.7)
	무직	15 (1.5)				3 (20.0)	10 (66.7)	2 (13.3)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5.2025	4	0.2671	128 (38.2)	168 (50.1)	39 (11.6)
	고졸	557 (55.5)				220 (39.5)	253 (45.4)	84 (15.1)
	대졸 이상	111 (11.1)				38 (34.2)	52 (46.8)	21 (18.9)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1.0989	4	0.8945	9 (42.9)	8 (38.1)	4 (19.0)
	중류층	894 (89.1)				345 (38.6)	423 (47.3)	126 (14.1)
	하류층	88 (8.8)				32 (36.4)	42 (47.7)	14 (15.9)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득분배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사회 교과서 경제 부분 중에서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의 이해 정도는 어떠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했더니, 전체적인 반응 결과가 ① 쉽다(9.3%) ② 보통이다(69.0%) ③ 어렵다(21.7%)로 나타났다.(〈表 23〉 참조)

$P < 0.05$ 수준에서 성별, 보호자 직업별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남학생(19.7%)보다 여학생(23.8%)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 보호자 직업별로는 농·어업, 상업, 공무원, 회사원 순으로 교과서 소득 분배 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1993년 김경근이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제지식 수준은 1백점 기준으로 약 54점 정도였고 경제개념으로서 소득분배에 대한 수준은 약 75점 정도였다.⁵⁸⁾

소득분배 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 218명(21.7%)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더니 ①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27.9%) ② 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26.5%) ③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43.4%) ④ 기타(2.3%)로 응답했다.(〈表 24〉 참조)

교과서의 소득분배와 관련한 내용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이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 자료를 비롯한 정확한 근거 없이 일반적인 사회 인식에만 기초하여 막연하게 서술하고 이를 주입식으로 교육한 결과라 여겨진다.

보호자 직업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57.1%)과 상업(50.0%)인 학생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58) 김경근(1994), 「한국 중학생의 경제 지식 수준」,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pp. 54-57.

<표 23>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의 이해도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전체		1,003 (100)				93 (9.3)	692 (69.0)	218 (21.7)
성별	남	512 (51.0)	8.7217	2	*	60 (11.7)	351 (68.6)	101 (19.7)
	여	491 (49.0)				33 (6.7)	341 (69.5)	117 (23.8)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3.4100	2	0.1818	53 (8.2)	458 (70.7)	137 (21.1)
	읍·면지구	355 (35.4)				40 (11.3)	234 (65.9)	81 (22.8)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16.6233	8	*	12 (9.7)	87 (70.2)	25 (20.2)
	회사원	110 (11.0)				15 (13.6)	82 (74.5)	13 (11.8)
	상업 (서비스업)	318 (31.7)				23 (7.2)	224 (70.4)	71 (22.3)
	농·어업	436 (43.5)				43 (9.9)	292 (67.0)	101 (23.2)
	무직	15 (1.5)					8 (53.3)	7 (46.7)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3.2917	4	0.5103	24 (7.2)	233 (69.6)	78 (23.3)
	고졸	557 (55.5)				56 (10.1)	384 (68.9)	117 (21.0)
	대졸 이상	111 (11.1)				13 (11.7)	75 (67.6)	23 (20.7)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1.8544	4	0.7625	3 (14.3)	13 (61.9)	5 (23.8)
	중류층	894 (89.1)				84 (9.4)	619 (69.2)	191 (21.4)
	하류층	88 (8.8)				6 (6.8)	60 (68.2)	22 (25.0)

* p < 0.05

〈表 24〉 소득 분배 내용이 어려운 이유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218 (100)				60 (27.9)	58 (26.5)	95 (43.4)	5 (2.3)
성별	남	101 (46.3)	1.7684	3	0.6218	25 (25.0)	31 (31)	42 (42)	2 (2.0)
	여	117 (53.7)				35 (29.7)	27 (22.9)	53 (44.9)	3 (2.5)
거주지별	시지구	137 (62.8)	0.0647	3	0.9957	38 (27.7)	36 (26.3)	60 (43.8)	3 (2.2)
	읍·면지구	81 (37.2)				22 (27.2)	22 (27.2)	35 (43.2)	2 (2.5)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25 (11.5)	21.4437	12	0.0442	9 (36.0)	2 (8.0)	12 (48.0)	2 (8.0)
	회사원	13 (6.0)				3 (21.4)	2 (14.3)	8 (57.1)	1 (7.1)
	상업 (서비스업)	71 (32.7)				11 (15.7)	23 (32.9)	35 (50.0)	1 (1.4)
	농·어업	101 (46.5)				35 (34.3)	28 (27.5)	38 (37.3)	1 (1.0)
	무직	7 (3.2)				2 (28.6)	3 (42.9)	2 (28.6)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78 (35.8)	6.0686	6	0.4156	26 (33.3)	20 (25.6)	31 (39.7)	1 (1.3)
	고졸	117 (53.7)				30 (25.6)	34 (29.1)	50 (42.7)	3 (2.6)
	대졸 이상	23 (10.6)				4 (17.4)	4 (17.4)	14 (60.9)	1 (4.3)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5 (2.3)	8.0380	6	0.2353	3 (50.0)		3 (50.0)	
	중류층	191 (87.6)				55 (28.9)	51 (26.8)	79 (41.6)	5 (2.6)
	하류층	22 (10.1)				2 (9.1)	7 (31.8)	13 (59.1)	

* P < 0.05

2) 경제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

소득분배를 포함하여 경제 관련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물음에 <表 25>와 같이 ① 가정 - 부모님, 가족(6.3%) ② 학교 - 선생님, 교과서(26.3%) ③ 사회 - 친구, 단체(4.2%) ④ 매스컴 - TV, 신문, 잡지(63.2%)로 응답했다. 경제 관련 지식을 선생님이나 교과서보다 매스컴을 통해 습득한다는 학생이 훨씬 많았는데, 이는 우리 학교 경제교육이 현실과 많이 유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P < 0.001$ 수준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에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는 학생이 여학생은 32.0%, 남학생은 20.9%인데 반해, 매스컴을 통해 습득한다는 학생은 여학생이 58.2%, 남학생이 68.0%로 남학생이 학교보다 매스컴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5$ 수준에서 거주지별, 보호자 학력별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매스컴에서 경제 관련 지식을 얻는다는 응답은 읍·면 지구 학생(56.3%)보다 시지구 학생(67.0%)이 훨씬 많고,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4.8%), 고졸(65.2%), 중졸 이하(56.1%)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일수록,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보다 매스컴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는데, 상업(72.3%), 회사원(70.0%), 공무원(63.7%), 농·어업(55.0%), 무직(53.3%) 순으로 매스컴에 의존해 경제 관련 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5> 경제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1,003 (100)				63 (6.3)	264 (26.3)	42 (4.2)	634 (63.2)
성별	남	512 (51.0)	23.2144	3	**** 0.0000	41 (8.0)	107 (20.9)	16 (3.1)	348 (68.0)
	여	491 (49.0)				22 (4.5)	157 (32.0)	26 (5.3)	286 (58.2)
거주지별	시지구	648 (64.6)	16.0369	3	** 0.0011	44 (6.8)	148 (22.8)	22 (3.4)	434 (67.0)
	읍.면지구	355 (35.4)				19 (5.4)	116 (32.7)	20 (5.6)	200 (56.3)
보호자 직업별	공무원 (교사)	124 (12.4)	35.0380	12	**** 0.0005	10 (8.1)	27 (21.8)	8 (6.5)	79 (63.7)
	회사원	110 (11.0)				4 (3.6)	24 (21.8)	5 (4.5)	77 (70.0)
	상업 (서비스업)	318 (31.7)				15 (4.7)	66 (20.8)	7 (2.2)	230 (72.3)
	농.어업	436 (43.5)				34 (7.8)	142 (32.6)	20 (4.6)	240 (55.0)
	무직	15 (1.5)				5 (33.3)	2 (13.3)	8 (53.3)	
보호자 학력별	중졸이하	335 (33.4)	20.2902	6	** 0.0025	25 (7.5)	103 (30.7)	19 (5.7)	188 (56.1)
	고졸	557 (55.5)				34 (6.1)	144 (25.9)	16 (2.9)	363 (65.2)
	대졸 이상	111 (11.1)				4 (3.6)	17 (15.3)	7 (6.3)	83 (74.8)
경제적 계층별	상류층	21 (2.1)	7.3372	6	0.2908	1 (4.8)	8 (38.1)	2 (9.5)	10 (47.6)
	중류층	894 (89.1)				60 (6.7)	228 (25.5)	37 (4.1)	569 (63.6)
	하류층	88 (8.8)				2 (2.3)	28 (31.8)	3 (3.4)	55 (62.5)

** P < 0.005

**** P < 0.001

IV. 結論 : 要約 및 提言

本研究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태와 중학생들의 소득분배 관련 의식을 조사하여 社會科 경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文獻 研究와 先行 研究를 토대로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과 우리나라 소득 분배 현황을 파악했으며,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제주도 중학교 3학년 학생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적인 반응 결과를 백분율로 파악하고 5개의 배경 변인별로 χ^2 검증을 통해 유의도를 밝혔다.

本調査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에 대한 先行 研究를 통해서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추계자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고, '90년 이후 미미하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公平'을 희생한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불평등도는 공식적인 통계상의 불평등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현행 사회과 교과서에서 소득분배 내용은 기능적 분배 이론에 치중하여 다루어지고 있으며,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타 경제 개념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경제 전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중진국 이상의 발전단계로 본다는 응답자가 지배적이었으며 선진국 단계로 보는 응답자도 44.7%나 되었다. 고도 성장의 주체로는 근로자(72.4%)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는데, 여학생(77.4%)이 남학생(67.2%)에 비해 근로자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했고, 남,녀 학생 모두 정부(9.7%)와 기업(15.2%)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이제까지의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이 量的으로는 성공을 하였으나, 質的인 형평의 실현에는 소홀하였음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성

장을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는 서비스업이 49.8%로 광업·공업(28.9%)보다 응답률이 높았고, 시지구 학생들이 서비스업, 광업·공업, 농림·수산업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읍·면 지구 학생들은 서비스업, 농림·수산업, 광업·공업 순으로 응답하여, 읍·면 지구 학생들이 1차 산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관에 있어서는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학생(33.2%)이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학생(15.2%)보다 많았으나 나머지 51.6%의 학생들도 현재와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 학생들(85.1%)이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심각한 장애 요소로는 환경 오염 문제, 물가 상승 문제, 소득분배 문제, 노사 갈등 문제, 무역 마찰 문제 등의 순서로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성장(33.4%)보다 분배(56.4%)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시지구 학생(53.7%)보다 읍·면 지구 학생들(62.3%)이 분배 정책에 더 많이 응답했다.

넷째,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빈곤의 책임은 정부(46.8%)에 가장 많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는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82.5%)이 지배적이었다. 本研究의 중심과제인 소득분배 문제에 있어서 과반수 이상의 학생(52.9%)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읍·면 지구 학생(58.0%)이 시지구 학생(5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등 요인은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소득분배의 개선 방안으로는 사회보험 제도와 누진세 제도를 선호하였다. 근로 소득의 격차 요인으로는 학력, 직종, 지역, 기업 순으로 응답했는데, 읍·면 지구 학생들(29.9%)이 시지구 학생들(20.5%)보다 '지역'을 소득 격차 요인으로 많이 꼽았고, 부모의 직업별로도 농·어업의 학생들(30%)이 타 직업의 학생에 비해 농촌과 도시 등 지역의 차이를 소득 격차 요인으로 많이 꼽았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34.8%)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소득분배 상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서는 지금과 비슷하거나(47.2%) 나빠질것(14.4%) 이라

는 비판적인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 교과서의 소득분배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3문항을 제시한 결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21.7%)은 그 이유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항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소득분배를 포함하여 현재 자신이 알고 있는 경제 관련 지식을 선생님이나 교과서(26.3%)보다 TV나 신문, 잡지 등의 매스컴(63.2%)을 통해 습득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읍·면 지구 학생보다 시지구 학생이, 그리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매스컴에 의존해 경제 관련 지식을 얻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교육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제윤리 및 태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所得과 富의 분배과정이 정당화 되려면 소득의 발생과 富의 축적이 비리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노력이나 능력이 뒷받침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도 경제윤리적인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겠다.

둘째, 사회과 경제영역에서 소득분배 관련 내용이 더 강화되어야겠고, 실제 수업에 있어서도 실생활 중심의 내용 구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경제교육과 관련한 有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변화하는 경제상황을 교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관련자료의 제공이나 교사의 연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너무 강조하거나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적인 설명을 통해 미래 경제 주체들이 우리 경제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행 社會科 교과서에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과 높은 성장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나 분배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유의해야겠다.

넷째,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문제와 절대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학교 경제교육에서는 경제윤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성공에 있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부의 빈곤 계층 존속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적 가치 갈등 상황을 수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논쟁적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⁵⁹⁾. 이 모형에서의 제안점들은 소득분배 개념의 가치관련 인지 문제의 학습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논쟁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논쟁적인 경제문제의 수업은 첫째 토론 중심이어야 하고, 둘째 증거 위주여야 하며, 셋째 교사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넷째 토론 수업에서는 절차적 규범을 강조해야 한다. 즉 강의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경제생활의 변화과정에서 논쟁적인 경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교육하자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이익추구의 원리를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의 원리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사회과 교육의 목적이 유능하고 책임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에 있다고 볼 때, 학교 경제교육의 목적은 경제적 사고방식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경제 교육은 정당한 富와 소득의 창출 과정을 내면화시키는 물론 분배 정의에 대한 감각과 실천 역량을 배양하는 경제윤리 및 태도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9) 曹永達(1992), "韓國 經濟社會의 變革과 市民經濟教育의 改善에 관한 研究," 「韓國 經濟教育의 實態 및 課題」, 국민경제교육연구소, pp. 334-345.

참 고 문 헌

<단행본>

- 교육부(1994), 「사회 2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4), 「사회 3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경근(1994), 「韓國 中學生의 經濟 知識 水準」,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서울대학교 社會敎育科 社會敎育研究會(1992), 「社會敎育 研究」, 敎育科學社.
- 宋丙洛(1994), 「韓國 經濟論」, 博英社.
- 윤석범(1994), 「한국의 빈곤」, 世經社.
- 李俊求(1992), 「所得 分配의 理論과 現實」, 茶山出版社.
- 이태근 외(1994), 「經濟 敎育 研究」, 이태근 박사 정년기념논문발간위원회.
- 貯蓄推進中央委員會(1989), 「初·中學生 經濟意識 調査」.
- 정승우(1994), 「中學校 社會 補充 資料」,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제주도 敎育청(1993), 「제주敎育통계연보」.
- 曹永達 외(1992), 「韓國 經濟敎育의 實態 및 課題」,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통계청(1991), 「한국의 사회 지표」.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1994), 「경제 교육」, 통권 제 5호.
- 한국교육개발원(1987), 「중학교 경제교육 연수 자료」.
- 韓國社會科敎育研究會(1989), 「韓國社會科敎育學概論」, 敎育科學社.

<논문>

- 김경모(1993), “韓國 學生의 所得分配 概念 理解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金龍河(1992), “所得 分配에 대한 中學生의 意識과 敎科書 內容의 適切性,”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李京姬(1993), “우리나라의 所得 分配와 국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李正淑(1993), “社會科 經濟領域의 內容 變遷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朱 潤(1993), “韓國의 階層別 所得 分配의 推移와 그 決定要因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타>

제대신문, 제 524호, 1995년 4월 12일자.

중앙일보, 제 9285호, 1995년 3월 21일자.



<Summary>

A Study of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ju-do toward Korean Income Distribution

Cho Jung Sun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Yong-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ing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Korean income distribution and middle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toward income distribution, presenting right direction of economic education in Social studies.

The author investigated the theory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students' consciousness concerned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result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income distribution became weakened continuously after the middle of 1980s' and then was improved slightly after 1990.

Second, the theory of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has been emphasized in

-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5.

the content of social studies' textbook. Furthermore the explanation about it was not treated concretely and treated roughly to other economic conceptions.

Third, according to result of investigation on income distribution, the students answered Korean income distribution was unbalanced(52.9%). It was said the main cause of unbalanced income distribution lay in not an earned income but property income. Also they answered the main cause of an earned income gap depended on the attainments in scholarship. The students preferred to social insurance system for improvable method related to income distribution(34.8%).

Nevertheless the students took pessimistic view concerned in income distribution in the future(61.6%). Most of respondents answered a person's economic success depended on one's efforts.

Fourth, the most respondents answered it was not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the content related to income distribution in social textbook of course, there were some students who answered the difficulty and they said the cause of difficulty lay in "not being concrete".

By the result of the study,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ethics and attitude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students in school.

Second, the teacher must not search for the enumeration of fragmentary conceptions or theoretical - central constitution but the content constitution related to students' daily lives.

Third, the teachers must not too emphasize government initiated economic growth, must not always explain the real condition of our economy affirmatively. We teachers must carry out economic education of recognizing economic problem rightly and of solving the problem rationally.

Finally, the students must carry out discussion central class and trust evidence - central class which is helpful to solving disputable economic problem.



< 설문지 >

중 학생의 경제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

이 설문지는 여러분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제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함께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앞으로 학교 경제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맞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 전공 조 정 순

다음 설문지의 내용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다 (0)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인적 사항 -----

1. 성별 ① 남 () ② 여 ()
2. 학생의 거주 지역은 ? ① 도시 지역 () ② 읍·면지역 ()
3. 보호자의 직업은 ?
① 공무원(교사 포함) () ② 회사원 ()
③ 상업(서비스업 포함) () ④ 농업·어업(노동 포함) ()
⑤ 무직 ()
4. 보호자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 이상 ()

5.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당신의 가족은 대체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상류층 () ②중류층 () ③하류층 ()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사항----

6. 경제적인 발전 단계로 보아 우리나라는 다음의 어느 수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선진국 단계() ②선진국 진입 단계() ③중진국 단계()
④중진국 진입 단계() ⑤후진국 단계()

7.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주체는 누구(무엇)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근로자() ②기업() ③정부() ④외국()

8.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려면 어느 산업의 발전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까 ?

- ①농림·수산업() ②광업·공업() ③서비스업()

9.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낙관적이다() ②그저 그렇다() ③비관적이다()

10.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11. 경제 발전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10번의 ①에 답한 사람만 해당, 자신의 생각과 같은 답이
없으면 ⑥기타에 꼭 적어 주세요)

- ①소득분배 문제() ②물가상승 문제() ③무역마찰 문제()
④노사갈등 문제() ⑤환경오염 문제() ⑥기타()

12.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경제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정책()
- ② 사회형평을 위한 균형적인 분배 정책()
- ③ 잘 모르겠다()

---- 소득 분배 문제에 관한 사항----

13.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본인() ② 가족·조상() ③ 지역사회() ④ 정부()

14.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의 생각과 같은 답이 없으면 ④기타에 적어 주세요)

- 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본인의 노력()
- ③ 학연 및 지연() ④ 기타()

15.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평하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불공평하다()

16. 소득 분배의 기능적 불균등은 어느 편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근로소득의 격차() ② 재산소득의 격차() ③ 잘 모르겠다()

17. 근로소득의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고졸·대졸 등 학력의 차이() ② 생산직·사무직 등 직종의 차이()
- ③ 중소기업 등 기업별 차이() ④ 농촌·도시 등 지역의 차이()

18.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제도() ②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 제도()

- ③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 ④국민 연금 등 사회보험 제도()
 ⑤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 제도() ⑥기타()

19. 앞으로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①나아질 것이다() ②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③나빠질 것이다()

----교과서의 소득 분배 내용에 관한 사항----

20. 사회 교과서 경제부분 중에서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의 이해 정도는
 어떠하십니까 ?

- ①쉽다() ②보통이다() ③어렵다()

21.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20번의 ③에 답한
 사람만 해당, 자신의 생각과 같은 답이 없으면 ④기타에 꼭 적어주세요)

- ①용어가 너무 어렵다() ②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
 ③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④기타()

22. 경제에 관한 지식이나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통하여 가장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

- ①가정 - 부모님, 가족() ②학교 - 선생님, 교과서()
 ③사회 - 친구, 단체() ④매스컴 - TV, 신문, 잡지 등()